

동독의 2국가 2민족론의 전개 과정과 배경

Online Series

2024. 05. 30. | CO 24-39

이 봉 기(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왜! 두 국가, 두 민족을 주장하는가?

동독(DDR,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민주공화국) 사회주의통일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이하 ‘동독 공산당’) 협의그룹은 1971년 2월 9일~10일간 모스크바에서 소련 공산당 당중앙위 위원들과 “독일 역사에서 민족 문제의 발전(Die Entwicklung der nationalen Frage in der deutschen Geschichte)”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동 협의그룹은 1971년 2월 23일 동독 공산당 당중앙위 정치국에서 위원들에게 동 건에 대해 보고하였고, 여기서 다음과 같이 ‘북한 노동당’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¹⁾

“제국주의와 국제적 대결에서 민족문제는 계속해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동독) 이외에도 북한 노동당과 베트남 근로자당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북한은 동독이 2민족론을 주장한 1970년부터 50년이 더 지난 시점에 동독이 실패한 2민족론을 역사에서 다시 소환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2023년 12월 30일 당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였고,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1) Walter Schmidt, “Das Zwei-Nationen-Konzept der SED und sein Scheitern – Nationsdiskussion in der DDR in den 70er und 80er Jahren,” *hefte zur ddr-geschichte* 38 (Berlin: Helle Panke, 1996), pp. 53~55.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지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1민족 1국가에서 이탈하여 2민족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동독의 1민족 1국가에서 2민족 2국가로의 통일정책의 변화는 서독의 이니셔티브에 대응하는 동독을 유지하기 위한 수세적인 정책이었다. 동독은 국가수립 초기에는 민족통일을 위한 실질적 정책과 분단과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두 축을 유지하였으나,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의 인민민주주의 그룹(Volksdemokratische Gruppe)이 오토 그로테볼(Otto Grotewohl)의 통일그룹(Einheitsgruppe)을 밀어내면서 동독의 “민족 프로파간다는 단지 소비에트화된 (부분)국가의 창출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은폐하기 위한 기술적 역할”로 전락하였다.²⁾ 이러한 동독의 ‘인민민주주의 우선’과 ‘통일 우선’의 대립은 북한의 2국가 2민족론 분석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는 동독의 통일정책으로서 독일정책이 어떻게 변화(1민족 1국가론 ⇒ 1민족 2국가론 ⇒ 2민족 2국가론)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동독의 2민족론의 대두 배경과 동독이 현실 정치에서 이를 어떻게 관철하고자 하였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동독 2민족론의 배경을 토대로 북한의 2민족론 주장의 배경을 검토하고, 북한의 2민족론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를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1민족 1국가에서 1민족 2국가를 거쳐 2민족론으로

동독은 국가 수립 초기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한 확신으로 전 독일을 사회주의화한다는 목표를 헌법에 담았다. 1949년 동독 헌법 1조는 “독일은 하나의 분리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이다”, “독일 국적은 단지 하나”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53년 6월 17일 노동자 봉기는 동독의 체제 정당성을 흔들었고, 울브리히트 당중앙위 1서기는 1953년 9월의 당중앙위 16차 회의에서 “독일에 사실상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하였고 흐루시초프는 동독을 방문(1955년 7월 26일), 두 개 국가이론(Zwei-Staaten-Theorie)을 제시하였다. 즉 “2차 대전 이후 독일제국의 영토 위에 상이한 정치질서를 가진 두 개의 주권국가가 세워졌다”는 것이었다.

1966년 서독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사민당이 기민당과 대연정을 통해 정부에 참여하게

2) Roland W. Schweizer, “Die DDR und die Nationale Frage. Zum Wandel der Positionen von der Staatsgründung bis zur Gegenwart,” APuZ, December 21, 1985, p. 5.



되었고, 동독 공산당은 “사민당의 대자본 및 독점자본 정부에 참여를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으로 평가”하였다.³⁾ 이제 동독 지도부는 통일과정에서 사민당이 노동계급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동독 공산당의 우군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점차 접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보다 명확한 두 국가 정책, 즉 서독에 의한 동독의 국제법적인 승인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동독은 1968년 헌법 개정을 통해 1조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은 독일 민족의 사회주의국가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독일 민족으로 동독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서독에는 자본주의 국가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1민족 2국가).

서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1956년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KPD(독일공산당)의 후속정당으로 DKP(독일공산당)가 1968년 재창당되었다. 동독 공산당은 서독의 1969년 9월 총선에 참여한 DKP에 대한 물질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총선에서 15명 정도의 하원의원이 당선될 것을 예상하였지만, DKP는 단지 0.3%라는 거의 참패에 가까운 득표에 그치고 말았다.⁴⁾ 이러한 결과는 동독 지도부가 염두에 둔 서독적 요인, 즉 통일 과정에서 서독 내 사회주의자와의 연대와 지지를 통해 서독을 사회주의화한다는 생각이 동독 공산당의 몽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려 주었다. 이제 동독에게 남은 선택지는 현재의 동독을 사회주의 국가로 유지하는 수성 전략 외에는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9년 10월 브란트(Willy Brandt)가 서독 총리로 취임하면서 집권 직후인 1969년 10월 28일 정부성명에서 “비록 독일 영토 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외국은 아니다”라고 하며 서독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 Doktrin)에 의한 단독대표권을 폐기하고 ‘사실상’의 1민족 2국가를 인정하면서도 동독에 대한 국제법적 국가 승인을 거부했다.⁵⁾

이에 따른 서독의 논리적 귀결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서 민족의 단일성 유지가 향후 통일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브란트 총리는 민족의 동질성 유지를 1970년 1월 14일 “민족상황에 관한 보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동독의 울브리히트 제 1서기는 1월 19일의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독일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주장은 허구이며,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그리고 독점재벌과 노동자 사이에 하나의 민족이

3) Heike Amos, *Die SED-Deutschlandpolitik 1961 bis 1989 - Ziele, Aktivitaeten und Konflikte* (Goettingen: V&R, 2015), p. 595.

4) *Ibid.*, p. 600.

5) 브란트가 “독일 영토 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외국은 아니다. 상호관계는 ‘단지 특별한 관계(besonderer Art)’”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동독 울브리히트는 12차 당 전원회의(1969.12.12.~13.)에서 이를 단독대표권의 새로운 변형이라고 비난하였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수하며 동독을 사회주의 독일 민족(sozialistischer deutscher Nationalstaat)이라고 주장하였다.

동독의 2민족론(Das Zwei-Nationen-Konzept)의 전개 과정 그리고 평가

새로운 민족개념의 공식적 프로파간다는 그 사이 울브리히트를 밀어내고 동독 공산당의 새로운 당서기장(1971년 5월)이 된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에 의해 1971년 6월의 제 8차 당대회에서 시작되었다. 호네커는 당대회 경위보고서에서, “부르주아 민족이 존속하고 있고 민족문제가 부르주아와 노동자 대중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계급모순을 통해 결정되는 서독과 달리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독일국가, 사회주의 민족이 발전되었다”고 밝혔다.⁶⁾ 이러한 호네커의 발표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당혹감을 표하였다.

동독은 이러한 2민족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치로 1974년 10월의 개정 헌법에서 1968년 헌법 1조의 “독일민주공화국은 독일 민족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조항을 “독일민주공화국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조항으로 대체하였고 이전 헌법의 “통일 및 민족”이라는 단어를 모두 지워버렸다.

이러한 2민족론이 동독 주민에게 어느 정도나 수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직접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동독 국가안전부 등이 비밀리에 조사한 사회적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⁷⁾ 즉 동독의 사회정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동독이 경제적 위기에 빠지기 전인 1983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7%는 양 독일이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약 10%만이 하나의 독일민족을 옹호하였으며 약 15%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였다. 12.6%는 무응답 등이었다. 동독 주민의 62.7%가 양 독일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답변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결국 동독의 2민족 프로파간다가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6) Protokoll des VIII. Parteitages, S. 55f. Gerd Dietrich, *Kulturgeschichte der DDR – Band II: Kultur in der Bildungsgesellschaft 1958-1976* (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19), p. 1424.

7) Walter Schmidt, 앞의 책, p. 11; Detlef Eckert/Juergen Hofmann/Helmut Meier, *Zwischen Anschluss und Ankunft* (Potsdam: 1992), p. 9; Heinz Niemann, *Hintern Zaun*, 1995, p. 111.

동독의 2민족론의 정치사회적 실행

동독 공산당은 2민족론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의 공식적 언어 사용에서 “Deutsche”와 “Deutschland”라는 단어를 지우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방송(Deutschlandsender)’은 1971년에 ‘동독의 목소리(Stimme der DDR)’로, ‘독일학술원(Deutsche AdW)’은 1972년 이후 ‘동독학술원(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DDR)’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⁸⁾ 그리고 동독의 우표 발행에서도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에서 ‘Deutsche’가 드러난다는 이유로 ‘DDR’이라는 약칭을 사용하였다.⁹⁾

독일(Deutsche, Deutschland)과 관련 체제가 개입한 오랫동안 회자된 웃음거리는 국가적 상징의 정점이었던 동독 애국가 제창을 실제 금지시켰던 것이었다. 요하네스 베허(J. Becher)가 쓴 가사가 1974년 이래 불려지거나 출판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금지된 애국가의 가사, 즉 “독일, 하나의 조국(Deutschland einig Vaterland)” 때문이었다.¹⁰⁾

이러한 동독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효과는 실제적 생활에 의해 다시 상쇄되거나 역전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였다.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서독이나 서방 물품을 판매하는 인터숍에 서독의 친지와 함께 방문하여 서방의 부를 감지하였고, 서독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서도 화면에 비치는 서독 생활의 풍요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의 2민족론(Das Zwei-Nationen-Konzept)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

동독이 급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게 된 배경과 조건은 무엇일까? 2민족론의 직접적인 배경과 이를 추동한 조건들을 다음의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¹¹⁾¹²⁾

첫째, 1960년대에 동독 공산당 지도부에게 명백하게 된 것은 그들의 전 독일적 계획,

8) Gerd Dietrich, *Kulturgeschichte der DDR - Band II: Kultur in der Bildungsgesellschaft 1958-1976* (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19), p. 1427.

9) 이와 반대로 서독에서는 1974년 5월 연방과 주정부 총리들이 만나서 공식적 문건에서는 약자 BRD가 아닌 Bundesrepublik Deutschland를 사용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Margit Roth, *Zwei Staaten in Deutschland - Die sozialliberale Deutschlandpolitik und ihre Auswirkungen 1969-1978*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81), p. 47.

10) Stefan Wolle, *Die Heile Welt der Diktatur - Alltag und herrschaft in der DDR 1971-1989* (Berlin: Ch.Links, 2013), pp. 68~69.

11) Walter Schmidt, 앞의 책, pp. 12~16.

12) Gerd Dietrich, 앞의 책, pp. 1424~1426.



즉 반제국주의적이고 사회주의 이념을 토대로 한 통일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958년부터 생활수준에 있어 서독을 넘어서려는 계획은 실패했고 오히려 점점 더 격차가 커져만 가고 있었다. 즉 체제경쟁에서 동독이 서독에 패한 것이었다. 이제 자신의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독에 의한 통일을 막아야만 하였다.

둘째, 1975년 헬싱키 의정서로 이어진 프로세스가 1966년에 시작되었고, 헬싱키 의정서는 2차 대전 이후 설정된 영토 등 국제질서를 인정하였다. 서독에서도 단독대표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타났고 독일의 현실, 즉 동독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셋째, 1969년 10월 28일 브란트의 정부성명에서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고 함으로써 서독이 단독대표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였고, 이로 인해 독일문제(통일문제)는 국가적 수준에서 민족적 수준으로 강조점이 변경되었다. 이것은 동독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민족 개념에 대해 숙고하게 하고 급진적으로 변화하도록 떠밀었다. 이에 대하여 동독은 통일의 불가뿐만 아니라 단일 독일 민족의 지속에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넷째, 동독에서 민족문제에 관한 정책 변화는 동독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동독 주민의 다수가 동독의 사회와 국가에 대해 동일시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1960년대 중반부터 체제수용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1970년대 중반에는 최고점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동독 공산당은 사회주의 애국주의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동독-민족의식을 정당성의 수단으로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사회주의 민족, 사회주의 조국, 사회주의 고향 혹은 우리의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동독 주민에게 독자적인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1960년 이후 동독의 정체성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주의 민족 테제가 과도하게 앞서 나간 것이고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가능한 반대 또는 모순 요인에 대한 고려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절대화하고 이데올로기화하였다는 것이다.

맺음말

동독의 2민족론을 통해, 왜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발언을 하고 있는지 유추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배경은 동독이 1966년부터 1969년 사이에 서독으로부터 경험한 사실들과 연결해 볼 수 있다. 동독은 1966년 서독 사민당의 연정 참여를 사민당의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하였고, 1969년 9월 서독 총선에서 독일공산당(DKP)의 참패 그리고 10월의 사민당 주도의 연정으로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서독 내 좌파에 대한 미련 또는 미몽, 즉 통일과정에서 서독 내 사회주의자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서독에서 실현하겠다는 것에서 깨어났다는 것이다. 북한도 이러한 경험을 남한으로부터 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30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여차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 그대로 이어져왔다 ...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는 것으로부터 북한 지도부가 동독과 같은 서독에 대한 환상을 남한에 대해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북한의 남한에 대한 반응은 동독이 보여준 것과 같은 2민족론의 주장이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동독에서 2민족론이 대두한 배경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첫 번째 사항, 통일의 기반으로 남북한 국력 격차이다. 남북 간 경제력 격차는 북한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이지만, 남한 내 진보세력에 대한 미몽으로 적어도 지금까지는 남북 간 통일문제를 전술적 차원이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 운용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2국가 2민족론을 주장하는 것이고, 북한 체제의 수성을 민족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통일문제에 대한 언급을 체제유지라는 전략적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혹시 김정은이 박정희 대통령의 “선건설 후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독의 2국가 주장으로 인해 동서독이 직면한 상황 또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서독에서는 “독일에서 2국가론은, 서독에게는 유감스러운 상황(bedauerlicher Zustand)이지만, 동독에게는 생존의 조건(Existenzbedingung)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¹³⁾ 현재 북한의 2국가-2민족론은 우리에게서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고, 북한에게는 동독과 마찬가지로 존립의 조건이다. 통일 논리가 강해질수록 북한에게는 존립의 위협이 커지는 것이고, 2국가-2민족의 논리가 강해질수록 우리에게서 영구 분단의 위협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회피하지 말고 마주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북한 2민족론에 의한 민족 이질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에 대한 남북한 민족 동질성 유지 및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3) Gerd Dietrich, 앞의 책, p. 1433. 여기서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표현된 것은 당시 서독 지식인들 사이에 분단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